

# “‘자원 배분’ 금융 본연 역할 다하면 소득불균형 해소”



## 전문가가 말하는 ‘포용 금융’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금융 정책인 ‘포용적 금융’이 성공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지배구조 개선, 복지지출 확대 등과 같은 소득분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권에선 시중은행과 같은 1금융권이 앞장서 관련 상품과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내 금융 소비자와 공급자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금융과 행복네트워크’ 정운영 의장은 3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금융이 본래의 역할을 잘 해나간다면 저소득 계층이나 사회적 약자가 적정한 비용으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저소득층은 이 같은 자금을 통해 소득을 증대시켜 나갈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내 소득 불평등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공공성’ 무시한 금융정책, 금융 양극화 야기

최근 일각에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지난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대출 위주의 과도한 영업 행위로 올 3분기 기준 1419조원의 가계부채 급증세를 야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올 상반기 기준 은행산업은 당기순이익만 8조원을 넘는 등 높은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금융의 ‘공공성’ 등을 무시한 정책으로 자급의 금융



조영철 고려대 교수  
수익성 중심 정책으로 ‘금융 배제’ 현상 심화

양극화 문제를 이끌었다는 지적이다. 정 의장은 “금융은 원래 자금이 필요한 곳에 적절한 배분을 해야 하는 등 역할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은행이) 적절한 자금 배분이라는 원래 기능을 상실하고 수익성 있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금융 등에 치중한 안정적 영업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책임이 크다”고 일갈했다. 은행은 금융당국의 인허가 사업으로 ‘사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곳이 아닌 ‘공공성 가치’를 추구해야 하기에 각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 금융은 ‘남의 돈’을 가지고 운용하는 것을 잊지 말고 공공성과 공정성을 중시해야 한다”며 “‘소비성 금융’에서 ‘생산성 금융’으로 역할을 어떻게 바꿔 나갈지 고심하고 생산적인 곳에 자금을 제공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금융의 본연의 기능임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  
공공성·공정성 중시해야 1금융권 관련 상품 개발

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정부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장관을 지낸 조영철 고려대 교수는 “금융산업의 수익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 정책이 금융사의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에 초점을 두면서부터다”고 진단하며 “금융정책의 기본 방향이 수익성 중심이 되면서 금융의 공공성은 크게 약화됐고 오히려 수수료와 금리로 고객을 차별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등 수익성에 도움이 안되는 고객은 암암리에 밀어내는 경영전략을 거리낌 없이 실행해 왔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이 초저금리 정책을 시행하는 동안 안정적 직업을 가진 고소득층은 기존 아파트 등을 담보로 서민보다 훨씬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 자산과 불로소득을 늘린 반면 저소득층에겐 금



김용기 아주대 교수  
포용 범위 국한돼 제한적 ‘금융 민주화’ 이뤄내야

융 접근성을 제한하는 ‘금융 배제’ 현상이 심화됐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이 같은 금융 접근성 격차 문제가 완화되면 문재인 정부가 주창한 소득주도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을 위해선 금융정책이 금융격차를 완화하고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단기적 성과 평가 안돼, 1금융권 앞장 서야’

포용적 금융은 현재 우리나라뿐 만이 아닌 전 세계적 이슈로 제시되고 있다. 지난 2009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거론된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을 추구한다’고 선포된 바 있다.

정 의장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신기술로 인해 출현하고 있는 다양한 핀테크의 확산은 금융포용의 기회로 작용한다”며 “이제는 소수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닌 공동체 기반으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사회로 전환되는 시점이며 혁신적 기술의 플랫폼 차원의 금융서비스가 금융포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효율성만을 강조하던 사회에서 공정을 중시하는 사회로, 이익만을 공유하는 사회에서 손실도 공유하는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포용적금융은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역할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다만 “(포용금융을) 단기적 성과로 평가해선 안되며 1금융권이 앞장서 관련 상품과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무엇보다 이를 운용하는 금융인이 금융의 주주가 포용금융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용금융연구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용기 아주대 교수는 “최근 포용적 금융에 대한 논의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 바람직하지만 그 범위가 저신용자의 신용회복과 채무탕감 중심, 서민금융을 위한 노력에 국한돼 제한적”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하며 “포용금융을 통해 금융혁신의 결과와 혜택이 다수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하고 금융의 민주화를 이뤄 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발판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 지난해 은행권 순이익 10년 만에 ‘사상 최대’ 13조

〈연도별 은행권 순이익 추이〉 단위: 억원

종목명	2016년	2017년	2018년
DGB금융지주	3,019	3,330	3,721
하나금융지주	13,997	20,064	21,552
KB금융지주	2,019	2,633	2,809
KB금융	21,902	34,149	33,363
광주은행	1,034	1,517	1,567
BNK금융지주	5,181	5,665	6,018
기업은행	11,646	15,030	15,635
우리은행	12,775	16,845	17,392
신한지주	28,249	33,580	32,383
합계	99,822	132,812	134,439

\*2017년·2018년은 추정치 /자료:에프엔가이드

### 전년 약 10조 비 30% 이상 급증 4분기엔 총당금 등 비용 반영할 듯

지난해 국내에 상장된 금융지주와 은행들의 순이익이 13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은행 순이익이 10조원을 돌파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인 지난 2007년 이후 10년 만이다.

주택담보대출 등 급증한 가계대출로 이자이익은 늘어난 반면 취약업종의 구조조정은 마무리되면서 대손비용이 크게 줄어 들었다. 이미 3분기 실적 만으로도 사상 최대 순이익이 예고되면서 은행들

이 4분기에는 총당금이나 희망퇴직 등 비용을 최대한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상장된 KB금융과 신한지주, KEB하나,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BNK금융, DGB금융, JB금융, 광주은행 등 9개 금융지주와 은행들의 지난해 연간 순이익 추정치는 13조 281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9조 9822억원 대비 30% 이상 급증한 수준이다.

연간 순이익은 지난 2007년 10조 6277억원을 고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친 2008년, 2009년에는 각각 6조 1292억원, 4조 9512억원으로 실적이 대폭 악화됐다. 반면 지난해는 KB금융과 신한지주, K

EB하나,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 5개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 만으로도 순이익 추정치가 11조 9668억원에 달한다.

은행별로는 KB금융과 신한지주의 순이익이 각각 3조 4149억원, 3조 3680억원으로 3조원을 웃돌았다. KEB하나 역시 전년보다 40% 이상 급증하면서 순이익 2조 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지난해 순이익 추정치는 1조 6845억원, 1조 5030억원이다. 전년 대비 각각 31.9%, 29.1%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연간 실적이 대폭 개선되면서 업계에서는 4분기에는 총당금 등의 비용이 최대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정대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3분기까지 이미 2016년 순이익을 넘어섰고 결산 분기이기 때문에 4분기에는 최대의 비용반영이 예상된다”며 “성과급 지급과 희망퇴직, 미뤄놓은 판관비 집행이 예상되고, 총당금 최대 반영과 박스(부실 털어내기) 등도 예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호타이어, 딜라이브와 관련 감액손실과 추가 총당금 외에 은행권 공통으로는 자기앞수표 미회수분 출연금이 영업외비용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전망도 밝다.

금리가 인상 사이클로 접어들면서 은행의 수익성을 가늠할 수 있는 예대마진은 올해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지만 은행들은 내년에는 기업 대출로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 광화문, 삼성·강남역 누르고 상권 1위... 매출 6조 육박

### SKT 상권분석 서비스 ‘지오비전’

3년 전 20위... 매출 8배 증가



서울시 광화문역 인근 상권이 강남역을 제치고 지난 1년동안 소비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상권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자사의 상권분석 서비스인 ‘지오비전(Geovision)’을 통해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의 전국 주요 20개 상권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지오비전은 위치와 인구, 지리 정보, 매출 정보, 소비업종 등 다양한 통계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주는 서비스다.

광화문역 상권은 지난 2013년 지오비전 조사에선 연매출 7411억원으로 주요

상권 가운데 20위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번 조사에선 8배 이상 매출이 증가하며 5조 8355억원의 연매출을 기록했다.

특히 광화문 상권은 도보로 10~20분 이내 이동이 가능한 시청역과 종각역 상권의 매출을 묶을 경우 매출 규모가 12조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역 인근 상권은 5년 전 1845억원의 연매출로 100대 상권 가운데 89위에 불과했으나 이번 조사에선 3조 8080억원으로 연매출 5위를 기록했다. 종각은 소비인구가 광화문과 시청역 상권으로 일부 이동하며 5년 전과 비교해 2단계 낮아졌으나

여전히 서울의 대표 상권 가운데 하나로 확인됐다.

반면, 2013년 전국 최고 매출을 기록했던 강남역 남부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는 13위까지 매출 순위가 떨어졌다.

SK텔레콤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연중 이어진 촛불집회 등 대형 행사로 인해 소비 인구가 강북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강남역 남부 상권의 연매출 순위 하락은 삼성 서초사옥 인력의 유출 수원 삼성디지털시티 이동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SK텔레콤의 하도훈 지오비전 담당 부장은 “강남역 남부 상권의 반대급부로 삼성디지털시티가 위치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경우 조사 이래 최초로 연매출 순위가 100위권 내(81위)에 들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인당 월평균 매출 1위도

### 〈전국 10대 상권〉

단위: 억원

순위	지역	상권	매출 男	매출 女	전체
1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	38,524	19,831	58,355
2	서울 강남구	삼성역	22,935	30,764	53,699
3	서울 강남구	선릉역	59,597	18,272	47,870
4	서울 강남구	강남역 위	21,895	19,000	40,895
5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22,025	16,056	38,080
6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15,668	14,929	30,597
7	서울 강동구	천호역	10,944	14,471	25,415
8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청역 인근	6,276	9,252	15,528
9	울산 남구	남구청	7,662	3,352	11,013
10	부산 중구	영주·중앙·국제시장 인근	5,664	3,664	9,329

\*2016.11~2017.10 기준

/SK텔레콤

390만원을 기록한 광화문역 상권이라고 밝혔다. 2위는 서울시 강동구 천호역 인근 상권이다. 연매출 규모는 7위에 불과하지만, 인당 월평균 매출은 320만원으로 광화문역과 함께 유이하게 연평균 매출

300만원 이상을 보였다. 이 밖에 선릉역(3위)이나 삼성역(5위), 강남역 북부(6위) 등의 다른 강남권도 인당 매출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김나인 기자 silkni@